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꼭 제정해야 한의학 과학화 기본정책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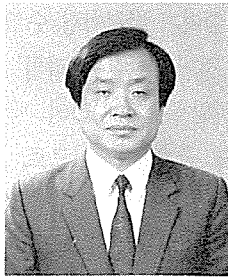
## 21세기 한국보건의과학 청신호

세계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보건복지부로 탈바꿈한 보건복지부가 구상해서 공포한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혁신 방안은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생명공학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분야야말로 선진국들이 노리는 국가 전략 사업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흔히들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메가트로닉스 및 신소재를 21세기의 4대 전략사업이라고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전공학을 모태로 하는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 과학기술 분야는 비록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벌어져 있을뿐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 앞서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는 제약기업과 각종 보건의과학 연구소 및 대학 등의 분발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조치



文玉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는 선진 제국에 비하여 늦었기는 하지만 21세기 한국 보건의과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조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정책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다.

계획에 의하면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전철 인근의 충북 청원군 오송 신도시(청주-조치원간) 내에 약 300만평 규모의 보건의료 과학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5년(1995-2010년) 동안에 약 7천억원을 투자하여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지는 장차 30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송 신도시의 약 7분의 1을 차지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초유의 보건의과학 단지도 시가 될 전망이다.

우리가 이 계획에 주목하는 것은 그 엄청난 규모보다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흩어져 있는 각 연구소 등을 한데 모으므로써,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겠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원을 7개의 연구소(암 연구소, 전염병 연구소, 생명공학 연구소, 노인의학 연구소, 정신행태 의학연구소, 보건의료기술 정보센터, 순환기질환 연구소)를 가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든지, 식품과 약품의 관리체제를 개편하는 것 등은 첨단연구를 통한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육성에 그 뜻이 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과 식품·약품청(FDA)이 그 모형이 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우선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식품의약품 안전관리원, 국립보건복지교육원, 국립의료원, 한국의학연구소, 한국의료관리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등이 민간부문의 연구 및 교육기관과 함께 자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산·학·연(産·學·研) 협동연구를 촉진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기능 단절과 낭비를 타파할 수 있게 된 점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

라 하겠다.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정책을 평가 조정하며,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원을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은 물론 보건의료기술 지원사업을 연구·기획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사업단을 향후 2~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일관된 보건의료 기술혁신 필요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구상이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열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를 당국에 주문한다는 의미에서 열거해 본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모처럼 구상해 낸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혁신 방안이 장관의 경질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1장관 1견주위에 너무 익숙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세계화되자면 한번 세운 정책은 큰 과오가 없는 한 끝까지 추진되도록 하는 전통을 수립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부문은 정책의 수립과 실천 및 평가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며, 정책전

환에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의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후 언젠가는 있게 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보건의료 과학기술 혁신방안의 실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당국자들이 마음을 써 주기 바란다.

둘째, 보건의료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할 때, 의견 수렴과정을 좀더 민주적으로 해서 보다 광범위한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이야말로 그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정책이므로,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인들의 의견까지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므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계획의 거의 절반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보건의료기술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다원화하므로써 충분한 기금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나 정부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의한 출연 방법, 그리고 차입금, 보건의료기술 이용자에게 일정 비율씩 각출하는 방법, 또 신규 보건의료기술 도입자에게 부과하는 방법 등을 연계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의 설립에 국민성금을 모으는 방법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줄로 알며, 이 경우 조세감면

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정부가 세운 이번의 시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진흥기금을 얼마나 충분히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넷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기술 자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첨부해야 할 줄로 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원을 설치하면서 기술진흥에 급급한 나머지 외국에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업무가 등한시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80%나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례를 들어서 고가의료장비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 제국의 의료기기 시장으로 종속되어 있어서 국민의료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고가의료장비의 상당수가 그 효능이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이를 검증해 낼 재간이 없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미국 의회 부속 기술감정원(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술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함이 없이는 현재와 같은 고가의료장비의 홍수를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건의료기술의 세계화예한의학의 과학화가 빠져 있어서 의아스럽다. 가장 '우리' 적인 것이 세계화의 첩경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의학의 과학화를 기본 정책방향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의술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첩경이기도 하려니

와, 고질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한방 의료 일원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이 틀림 없다.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도 이미 양한방 협진 체제를 만들어 운영해 온지 오래되며, 일본의 경우도 한방에 대한 양의사들의 관심이 고조될 대로 고조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최근에 설립된 한의학연구소를 단지 내에 수용하므로써, 그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양한방 협진체계에 대한 연구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수용하므로써, 양한방의 높은 벽을 허물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신약개발부문에 투자 우선을

여섯째, 첨단과학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실현가능성이 큰 부문이 신약개발 부문이 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를 높게 잡아 달라는 주문을 빠뜨릴 수 없다.

선진 제국에서도 이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미국에서는 2억3천만불이 소요되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미화 1억불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자를 우리나라 제약기업 자체에서만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연구비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15%, 일본의 12%, 독일의 15%에 비교할 바가 못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약 시장이 선진국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21세기에는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협조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전폭적인 확대가 필수적인 바, 이 역할을 보건의로 진흥 기금이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인의 두뇌만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일곱째, 생명과학만큼 고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여타 분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을 우리나라의 국책 프로젝트화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한다. 그동안 보건의로 산업은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 대상에서 언제나 소외되어 왔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조건 하에서도 보건 의과학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노벨상 수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는 말을 흔히 듣는다. 이런 기적과 같은 사실에 직면할 때,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만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분야가 그 꽃을 찬란하게 피우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진다.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입법 조치가 또 하나의 족쇄가 되어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의로 산업은 정책 지원 대신에 대표적인 규제 행정의 대상이었다. 행정의 규제 완화가 없이는 세계화도, 국제경쟁력도 헛구호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거가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주문하는 바이다. 이러한 자율성은 물론 보건의료 종사자들 자신이 전래의 타성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전체 사회체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규제가 지속되는 한 자생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가지는 잘라 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가지가 다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곤란하다.

우리 사회엔 아직 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으며, 인의(仁義)의 의료인이 더 많기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 정책적인 배려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보장하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의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가히 획기적인 보건의료기술 혁신방안을 바라보는 필자의 심정은 한마디로 『정부(보건복지부)도 상당히 많이 변했다』라는 점이다.

과거의 어떤 정부도 이처럼 혁신적인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이것이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시각을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도 새롭다. 이 모든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계획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보건정책에 대하여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산·학·연, 국민과 정부가 똘똘 뭉쳐서 보건의료계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또한 그리하여 보건의료기술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효자(孝子) 역할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

다가오는 2000년대의 새로운 보건 의료계의 모습을 기대한다. ⑤7